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대한민국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우리나라 국방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45세의 외국인
- ② 외국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25세의 대한민국 국민
-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62세의 대한민국 국민
- ④ 영화·문화·관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문 2. 甲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장이며, 甲의 업체는 주무부장관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甲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및 확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甲의 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경우, 甲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甲이 고지된 임무에 관하여 작성한 실시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권한 또는 지위와 그 해당기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기관 - 국무총리
- ㄴ.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 국무총리
- 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정부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 - 국무총리
- ㄹ.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권한 - 행정안전부장관
- ㅁ. 비축명령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무총리의 확인·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권한 - 주무부장관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비상대비교육은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어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비상대비훈련의 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훈련이 면제되나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은 훈련이 면제되지 않는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집행 계획안을 심사한다.
- ㄷ.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관장 사무로서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ㄹ.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구성이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집행 계획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 ② 기본 계획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되며, 이 때 그 기본 계획안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작성한 기본 계획 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④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 계획은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 A시에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A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난 등의 급박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므로 A시 B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원 명령을 발하였다.

- ① B동의 동장은 동원 명령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시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A시의 시장은 지진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일시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②의 경우, 시설 또는 장비의 일시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도의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그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상으로 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재해 보상금 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의 유족과 같은 보상을 한다.
- ③ 부상에 대한 재해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치료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2017년 11월 24일 현재 민방위대로 조직되는 자는?

- ① 1991년 7월 1일 출생하였고 2010년 3월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 남성 甲
- ② 1977년 3월 1일 출생하였고 2017년 8월 1일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의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남성 乙
- ③ 1993년 6월 1일 출생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남성 丙
- ④ 1995년 4월 1일 출생하였고 현재 주한 미군 부대 고용원인 남성으로 민방위대에 지원한 丁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35세의 남성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B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甲은 B기업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B기업 직장 민방위 대원은 20명이다. 甲은 2017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A시 ○○동에 거주하면서 1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 ① 甲이 퇴직함으로써 B기업의 직장 민방위대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 ② B기업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A시 ○○동의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B기업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으면 A시 ○○동의 동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甲의 지역 민방위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한다.
- ④ A시 ○○동의 동장은 甲을 추가한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2018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32세의 남성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인 A회사(서울시 B구 C동 소재)에 재직중이다. 甲은 A회사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있는데, A회사의 장(長)인 乙은 A회사에서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長)인 丙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2017년 9월 27일 9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 ①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B구의 구청장이 2017년 9월 19일 24시까지 丙을 거쳐 甲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甲이 없으면 乙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甲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2017년 9월 27일 8시까지 그 사유를 甲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B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았음에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 ④ 甲이 6개월간 외국 체류 중임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乙을 거쳐 C동의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이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이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피호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에 대형 산불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관할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인 甲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민방위 대장 乙)의 동원을 명하였다.

- ①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②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기 위해 제거한 경우, 甲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③ 乙이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 ④ 乙이 민방위 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방위를 끝내고 돌아오는 甲에게 자신의 집 공사를 하게 한 경우, 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상 예비군의 무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이 침투한 지역에서 적 소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전시에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무장 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이를 진압할 수 없을 때 무장 소요 진압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5. 예비군법령상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ㄴ.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 ㄷ.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ㄹ.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회의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26. 甲은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이며, 乙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에 관한 권한을 甲으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예비군법령상 甲과 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그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乙을 지휘·감독한다.
- ② 乙이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甲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乙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④ 甲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甲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乙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행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②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③ 급수 수단의 확보
 - ④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시 행해질 수 있는 조치와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로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④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의한 사전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 ③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 그 매뉴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통계 등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ㄷ.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ㄹ. 폭죽을 사용하는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ㅁ.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 ②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업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여 그 사용인을 벌하는 경우라도,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더라도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는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
- 문 35. A시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수차례의 여진이 계속되었는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A시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시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통제단장은 A시의 재난현장에서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중앙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A시의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은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A시의 시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법령 I - 헌법

- 문 1.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도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그리고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진다.
 - ②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닌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 문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모욕적 표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인격권 중 명예권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야기한다.

문 3.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정당에 있어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서는 의결할 수 없다.
 ㄴ.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ㄷ.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범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④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누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5.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 ④ 「교원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쟁의행위는 금지되지만, 국공립 학교 교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

문 6.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3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 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및 양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④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감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 ③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 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 ②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③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권을 명할 수 있으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복권을 명할 수 없다.

문 10.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의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 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 ② 국회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회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문 1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은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문 1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청법원이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형사처벌 근거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도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른 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
- ③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 1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②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는 선거사무의 처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